【논 문】

지역조사와 식민지의 경계지대

-1919년 전후 동척과 조선은행의 간도조사*-

조 정 우**

차 례

Ⅰ. 들어가며: 간도라는 경계지대와 현지조사
Ⅱ. '문제'로서의 간도: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와 나이토 코난
Ⅲ. 간도 지역조사의 출발: 1915년 조선총독부의『국경지방시찰복명서』
Ⅳ. 동척의 간도 지역조사, 1918년『간도사정』
Ⅴ. 조선은행이 조사한 간도 경제와 상업 중심지 용정
Ⅵ. 나가며: 조사체제의 전환, 영토주의에서 경제주의로

국문초록

일본은 식민지의 경계지대 간도와 그곳의 조선인들에 대한 많은 조사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그 조사의 목적과 특징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사 자료가 선택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근대사 연구의 맥락에서 간도조사의 계보를 재구성하여 그 조사의 성격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간도조사는 ① 제국 영토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국경조사, ② 제국 신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족관계 조사, ③ 제국 경제권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 경제조사라는 3개의 유형별 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특히 1919년 전후 간행된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은행의 조사서는 간도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영토주의에서 경제주의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주제어: 간도조사, 지역조사, 필드워크, 동척, 토지상조권, 용정, 국경무역, 중개무역

* 이 글은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의 제3회 학술세미나(2018.3.23)에서 발표한 글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www.kci.go.kr

Ⅰ. 들어가며: 간도라는 경계지대와 현지조사

한국에서 '간도(間島)'라고 불리는 지역은 현재는 중국 동북(東北)의 연변(延邊)에 해당하는 곳이다. 물론 간도와 연변이 공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만강 너머에 있는 한민족(韓民族)의 거주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역사적으로 간도는 유민(流民)의 땅이자 항일독립운동의 무대였고, 사회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朝鮮族)이 자치주를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다. '延'·'邊'이라는 한자에서 볼 수 있듯, 이 지역은 중국사에서나 한국사에 있어서나 변경지역이다.

오랫동안 간도는 여진족을 비롯한 북방민족의 삶의 공간이었는데, 청이 건국된 이후 봉금령(封禁令)이 실시되면서[1] 역사의 뒷켠으로 물러나 있었다. 간도는 출입이 금지된 봉금지대로서 한동안 세계사의 변동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럽 국가인 러시아가 동진 정책을 펼쳐 시베리아를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1860년 '북경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자 간도는 조선-청-러시아 3국의 국경이 맞닿는 경계지대가 되어 버렸다. 광대한 원시림이 펼쳐져 있고, 일부 조선인들이 채취와 수렵을 위해 몰래 넘나들던 간도 일대가 이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동이 중첩되는 문제지역으로 급변한 것이었다.

간도에 대해 여러 형태의 조사가 실시되었던 것은 간도가 갖는 이 경계지대로서의 특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9개국의 변방인 '조미아(Zomia)' 산악 지대를 연구한 제임스 스캇의 논의에서 보듯,[2] 국가 통치의

1) 청 왕조는 언젠가 중원에서 철수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주를 북방 기마민족의 공간 그대로 보존하려 하였다. 한족(漢族)을 비롯한 이민족의 만주로 천이(遷移)해 오는 것을 봉금령으로 원천봉쇄한 것이다.

2) 제임스 C. 스캇, 이상국 역, 2015,『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 아나키즘의 역사』, 삼천리. '조미아'는 베트남·라오스 북부에서부터 중국 남부, 인도동북부에 걸친 해발 300미터 이상의 고지대를 일컫는 조어로, 1억 이상의 소수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변경지대이다. 이 중심지가 없는 광대한 산악지대는 국민국가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탈주와 저항의 공간이면서 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국 한족(漢族)의 천이를 거부해 온 공간이라는 점에서 만주의 공간적 특징과 유사한 점이 많다.

www.kci.go.kr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경계지대가 갖는 모호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해야만 했다. 측량을 하여 지도를 제작하고 재래의 문헌을 정리하는 것은 경계지대의 모호성을 가독성 있는 기호로 전환하여 가시화하는 작업이었다. 지도와 문헌으로도 읽어 낼 수 없는 것들은 현지조사(fieldwork)를 통해 해독해내야만 했다. 제국이 식민지의 지리와 역사를 편찬하고 유물을 수집하여 박물관에 전시하고, 또 현지조사 보고서를 간행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제국일본 역시 대만과 조선, 그리고 만주에 대해 막대한 분량의 지도와 문헌을 편찬하였고,[3][4] 또 주요 지점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식민지의 역사와 문화를 읽어 내려 하였다. 그러면서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식민지의 현실 사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통해 그 움직임을 포착하려 하였다. 간도는 조선과 만주 사이에 놓인 경계지대로서 보다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근대 일본에게 있어 조선과 만주는 일찍이 '만한(滿韓)'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일본(인)이 뻗어나가야 할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조선과 만주의 국경에 위치한 간도는 '만'과 '한'을 구별지우면서도 이어주는 경계지대였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 팽창에서 각별한 관심을 부여받았다.

일본이 간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또 적지 않은 조사 기록을 남긴 것은 간도가 갖는 이와 같은 정치군사적 중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잘 알

3) 남만주철도주식회사조사부('滿鐵調査部')가 1908년부터 조사・간행한 '滿鮮歷史地理' 시리즈는 제국이 식민지에서 맨 먼저 찾고자 한 학지가 역사와 지리였음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만철조사부의 『만주역사지리』, 『조선역사지리』 편찬에 대해서는 박찬흥, 2015, 「滿鮮歷史地理調査部와 고대 '滿鮮歷史地理' 연구」, 『역사와 담론』 75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주로 지리학을 통해 외부에 대한 학지를 구성하였는데, 만주에 대한 프랑스 지리학의 조사에 대해서는 임동근, 2017, 「프랑스 지리학의 만주인식의 변화 : "아날드제오그라피" 논문에 등장한 '만주'」, 『만주연구』 24를 참조할 것.

4) 식민화 초기부터 일본은 조선 고래(古來)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여 조선에 대한 역사상(歷史像)을 정립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초기 조선 역사 조사자들이 기록 문헌 보다는 고고학적 유적을 사료로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식민지 학지의 구성이 갖는 미묘한 곤란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囑託)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www.kci.go.kr

려져 있듯이, 1907년 조선 통감부는 간도의 조선인 집주지인 용정촌(龍井村)에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라는 명칭의 통감부 행정 조직을 설치하여 간도의 문제성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또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동양사-중국사 학자인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은 군부의 지원과 협조로 통감부 시기 동안 간도 일대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기도 하였다.[5)]

현재에도 조선족 집주지이자 북한-중국-러시아의 경계지대인 연변에 대해서 사회학・인류학의 지역현장조사(area fieldwork)가 조용하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100여 년 전의 근대 시기에도 간도 일대는 그 정치적・사회적 문제성으로 인해 조사 대상지로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간도(와 만주)는[6)] 다른 지역조사와 달리 조사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복합성의 원인은 무엇보다 만주 지역의 영토주권이 명확하지 않은 데 있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조선에 대한 조사는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잦았고, 혹 학술기관이 조선을 조사한다고 할 때에도 조선총독부 행정조직의 협조・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했었다. 이에 반해 만주는 일본, 중국, 러시아가 경합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사의 주체는 물론이고 조사의 방법과 목적도 각기 상이하였다. 즉, 같은 지역, 같은 주제를 조사했다 하더라도 그 편차(bias)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편차가 큰 자료들을 특정한 연구방법론에 따른 개념화와 조작화 없이 사용할 경우 자료의 활용이 선택적(selective)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5) 나이토 코난의 간도 조사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기존 연구들에 대한 비평은 윤해동, 2018, 「나이토 코난의 '동양문화' 연구와 '근세론'의 명암」,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 소명출판의 21~26쪽을 참조할 것.

6) 간도와 만주를 서로 다른 공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간도를 만주의 일부 지역으로 볼 것인지는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간도는 행정구역 지정을 통한 영토화 과정에서 만주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었고 또 대체로 그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간도와 만주가 전혀 상이한 층위의 범주일 수 있다. 간도는 공간이 아니라 이동의 범주이며, 만주에서 영토주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무한한 이동성으로서의 간도가 특정한 경계를 가진 지역으로서의 공간으로 재편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www.kci.go.kr

지금도 만주에는 엄청난 양의 문서들이 아직 사서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한 채 아카이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연구자들에게는 자료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지만,[7] 그 막대한 자료들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근대 만주에 대해 가장 많은 조사자료를 남긴 '만철조사부(滿鐵調査部)'에 대해서도 조사부 조직에 대한 일부 연구 이외[8] 아직 조사의 목적, 방법, 유형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만주에 대해 연구를 할 때에는 자료의 작성 주체, 목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만주 지역조사 중에서 우선 그 주체가 식민지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조사자료들이 어떤 계통에 있었던 것인지를 이해해 보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 중에서도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은 1919년을 전후해서 간행된 제국일본의 간도 조사보고서들이다. 이는 첫째, 간도 조사의 역사에 있어 이 시기에 이르러 역사조사가 아닌 지역조사 형태의 보고서가 본격적으로 간행되었다는 점, 둘째, 그런데 이 지역조사의 주체가 바로 식민지 조선에서 사업을 하던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은행이라는 두 국책식민회사였다는 점, 이 두 관찰 지점의 연관성을 해명해 보기 위해서이다.

Ⅱ. '문제'로서의 간도: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와 나이토 코난

1919년 3.1운동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20년 간도에서 무장항일독립군이 6월에 봉오동에서 또 10월에 청산리에서 잇달아 일본군 정규군을

7) 중국 東北의 각 아카이브에는 동북군벌의 행정자료, 러시아 동청철도의 자료 등이 대거 소장되어 있지만 아직 자료의 인덱스 작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자유로이 열람도 할 수 없다.

8) 만철조사부는 만주국이라는 국가의 성격, 사상과 지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대상으로, 일본학계에서도 일찍이 그 조직적, 인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도 만철조사부의 만주 조사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특정한 내용에 한정해서 논의하고 있을 따름이다.

www.kci.go.kr

격파하는 전과를 올린 것은 한국의 항일운동사에서 간도가 갖는 독보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간도가 무장항일투쟁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만주에는 1930년대 중엽까지도 영토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차적 이유일 것이다.

만주는 '중화민국' 성립 이후 법적으로는 중국의 영토로 선언되었지만, 1928년 역치(易幟) 이전까지 장작림-장학량의 동북군벌이 지배한 군벌의 공간이었다. 게다가 북만주 지역의 경우에는 제정 러시아가 건설하여 권리를 확보한 동청철도와 부속지가 만주를 가로지르며 놓여 있었는데, 공산주의 소련이 그 권리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관할 하에 두고 있었다.[9] 일본 또한 대련과 장춘을 연결하는 남만주 철도 노선과 부속지에 대한 배타적 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중국도, 소련도, 일본도 만주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32년 일본에 의해 '만주국'이 건국되고 1936년 동청철도가 만주국에 매각되고 또 1938년 무렵 '치안숙정공작'에 의해 북만주의 항일운동세력이 거의 일소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인 독립군은 이러한 만주의 국제정치적 조건을 십분 활용하면서, 때로는 그 조건의 급변에 희생되기도 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갔던 것이다. 이 투쟁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되었던 것은 바로 만주의 조선인 농민들이었다. 이 조선농민들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무장게릴라 활동의 은폐된 보급창 역할을 했던 것이다. 중국혁명과 베트남전쟁이 잘 보여주듯, 게릴라형 군사행동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지원, 내부적으로는 농민민중의 지원,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통감부 설치 이후부터 두만강・압록강을 넘나드는 조선인을 각별히 관리하려 하였다. 간도를 중심으로 만주 곳곳에 산재한 조선농민들과 항일운동세력 간의 관계를 끊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침

9) 소련과 중화민국은 東淸鐵道를 공동 운영하는 법적 형식을 취했지만, 경영조직과 자본구성에 있어서 사실상 소련이 우위를 점해 중화민국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었다.

www.kci.go.kr

략' 정책에 있어 선결 과제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를 용정(龍井)에 설치한 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조선의 식민화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이하, '간도파출소'로 약칭)에 대한 관제는 이미 1907년 2월에 마련되었다. 하지만 청이 영토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기구가 아닌 일반 행정조직을 간도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청과의 협의가 미처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간도파출소 관제를 마련하였다. 일본은 간도가 영토 문제가 있는 지역이며, 또 보호국인 대한제국의 신민(臣民)인 조선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간도파출소 설치를 고집하였다. 조선인을 관리하고 있는 통감부가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간도에 급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10]

일본정부는 일찍이 조선과 일본, 또 일본과 청의 관계에 있어 간도가 갖는 문제성을 간파하여 러일전쟁 기부터 간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초대 조선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적극적인 간도 개입을 주장하며 간도독무청(間島督務廳)과 간도헌병대의 편성을 본국에 요청하기도 하였다.[11] 메이지 시대 일본이 식민지나 점령지에 설치한 기구(關東都督府, 朝鮮總督府 등)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에서도 그 관제의 특징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도독은 군정관(軍政官)의 성격을 띠며 총독은 군권만이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관할하는 직책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토가 말한 '독무청'은 그것이 도독부이든 총독부이든 간도에 대한 군사적인 조치를 배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사가이자 동양학자인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이 일본 외무성의 의뢰로 간도 일대와 만주를 수차례 조사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10) 이왕무, 2013, 「해제: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의 설립과 간도 경계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22~26쪽.
11)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3, 위의 책, 49쪽의 각주1).

www.kci.go.kr

다.[12] 나이토는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6월 일본의 만주 점령지 조사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09년까지 3차례 간도・만주 지역조사에 참여하여, 1906년에 「간도문제조사서(間島問題調査書)」라는 보고서를 육군과 외무성에 제출하였고, 이듬해에는 1907년 판으로 같은 제목의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와 병행하여 「한국동북경계고략(韓國東北境界考略)」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1909년에는 1908년 가을에 조사했던 내용을 정리한 「간도문제사견(間島問題私見)」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13]

나이토 코난의 간도 조사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14] 그의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간도의 경계에 대한 연혁적 조사를 통해 일본정부가 간도 영유권에 대한 방침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었다. 나이토가 조사한 것은 일본에 있어서 간도가 어떤 문제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그의 보고서는 "간도문제"를 제목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일본이 직면한 간도의 문제는 청과 조선 간의 국경 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 그 자체였다. 조선을 보호국화하여 통감부를 설치한 이상, 통감부의 감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다. 이 범위에는 대한제국의 국경선을 긋는 문제와 간도 조선인에 대한 통감부의 관리감독권 문제,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었다.

---

12) 나이토 코난의 조사를 비롯한 러일전쟁 기 일본의 간도 조사에 대해서는 金静美의 책에 그 정치적 목적과 실행 과정이 간명히 설명되어있다. 金静美, 1998,『中国東北部における抗日朝鮮・中国民衆史序説』, 現代企画室, 74~79쪽.

13) 윤해동, 2018, 앞의 글, 23~24쪽. 1906년『間島問題調査書』의 원문은 일본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다.

14) 나이토 코난의 간도 조사에 대한 연구사는 위의 윤해동의 앞의 글(2018) 21~24쪽에 정리되어 있는데, 한국학계와 일본학계가 조사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일본학계에서는 나이토의 간도 조사가 조선 식민화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간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한국학계에서는 나이토의 간도 조사와 조선 식민지배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해동은 나이토의 간도 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양학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도 조사를 계기로 나이토가 중국사-동양문화론으로 연결되는 연구체계를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간도 조사만을 분석해서는 그 조사가 갖는 성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www.kci.go.kr

나이토 코난은 역사학자로서 간도 국경 문제에 대한 연원과 그 전개 과정을 조사·정리했기 때문에 그의 보고서는 두만강 국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로 알려져 있다.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들이 나이토의 조사서에 대한 계승이나 비판을 주된 논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가 남긴 자료와 시각이 갖는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간도 조사는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고 또 문헌연구를 방법으로 한 것으로, 지역의 공간적 구조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지역조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문제해결형 조사'로서, 나이토는 방대한 기록문헌을 검토하여 간도의 국경 문제와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과정을 정리한 것이지, 간도라는 지역의 구체적 '현실'을 조사한 것은 아니었다.

간도파출소가 조사한 간도 자료를 정리한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1910.3, 이하 '간도파출소기요'로 약칭)[15] 역시 국경 획정이라는 당시의 '간도문제'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도파출소는 1909년 이른바 「간도협약」에 의해 일본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간도 용정촌에 간도파출소 대신 외교기구로서 '간도총영사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그해 11월 1일에 관제가 폐지되어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기관 폐쇄 후 잔무 처리 및 업무 정리를 위해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잔무정리소(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殘務整理所)'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서 그간 간도문제에 대해 간도파출소가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1910년 3월 간행한 것이 이 '간도파출소기요'이다.[16]

간도파출소기요의 첫 장은 「간도문제의 내력」으로 간도를 '문제'로서 설정한다. 또 그 첫 문장은 "교토제국대학 나이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으로 하면서 나이토 코난의 간도문제 조사연구가 간도파출소의 간도 국경 조사

15)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번역한 『訳註『統監府間島臨時派出所紀要』』(2013)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간도파출소기요의 원문은 일본 외무성외무사료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영인본으로 간행된 바 있다. 상세 현황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위 역주서 2013의 5쪽을 참조할 것.

16) 동북아역사재단, 2013, 위의 책, 3쪽.

www.kci.go.kr

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17] 간도파출소에 있어 간도문제는 곧 국경획정의 문제였으며, 간도조사의 중심 축 역시 국경 문제의 연혁 및 귀속 문제에 두고 있다. 간도의 조선인은 이 국경 획정 및 귀속 문제의 파생 문제로, 영토 영유권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조선인 '보호'를 위해 통감부가 간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했던 것이다. 간도파출소의 초대 소장 사이토 스에지로(齋藤季治郎)의 파출소원 훈시는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 간도가 한국과 청국 어느 쪽의 영토에 속하는지는 현안(懸案)이 된 지 오래다. … 보통의 순서대로라면 제국정부는 우선 청국정부와 교섭하여 경계선을 결정함이 옳다. 그러나 청국의 지금 현상은 이와 같은 수단으로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에 우리 정부는 우선 이 지방에 거주하는 한국신민의 보호에 착수하고, 경계담판(境界談判)은 이를 후일로 미루고자 하므로, 현하(現下)의 형세에서 이 지방은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서 조치(措置)할 수 없음과 동시에 또한 청국의 영토로서 인정할 수도 없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18]

간도파출소는 그 조직으로 ①총무과, ②경무과, ③조사과, ④감찰과의 4개 과를 두었는데, 각 과는 각기 업무를 부여받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몇가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간도파출소기요에 수록된 조사 내용들은 각 과에서 작성한 조사보고를 편집한 것이다. 각 과의 사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총무과는 간도의 제도연혁 및 인정관습(人情慣習)을 조사하고, 주민 간의 쟁의, 교육과 종교, 교통기관에 대한 사항 등 간도의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업무의 대상으로 하였다. ②경무과는 '안녕질서'와 전염병 및 위생 문제를 담당하였고, ③조사과는 지질・광산・농업・산림・공업・토목 등 산업 관계 부문을 특정화해서 조사하였다. ④감찰과가 담당한 것은 바로 조선인에 대한 사항 일체였다.

17) 동북아역사재단, 2013, 위의 책, 49쪽.
18) 동북아역사재단, 2013, 위의 책, 101~102쪽.

www.kci.go.kr

간도파출소 감찰과는 '한국인의 보호무육(保護撫育)', '한국인의 호구조사', '한국인의 이권(利權)조사', 이 3개 사항을 사무로 하는 조선인 관리 조직이었다.[19] 『간도파출소기요』의 「6장. 한국민 보호에 관한 시설」에는 통감부 시기 간도 조선인 사회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감찰과의 조선인 사무의 내용이었다.[20] 이렇게 보면, '기요'라는 형식으로 작성된 간도파출소의 간도 조사서는 통감부의 행정조직이 조직에 부여된 특정한 업무를 위해 조사작성한 '행정조사'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21]

Ⅲ. 간도 지역조사의 출발: 1915년 조선총독부의 『국경지방시찰복명서』

간도조사의 계보를 추적할 때 지역조사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1915년 간행된 「국경지방시찰복명서(國境地方視察復命書)」(朝鮮總督府, 1915年3月)를 들 수 있다.[22] 이는 조선총독부 측이 압록강·두만강 일대를 1914년 여름에 2개월간 현장조사를 하여 현황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출장보고서이다.

조사가 입안된 특별한 경위나 사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간도 월경 조선인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로서도 "국경지방의 실지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조사반을 편성, 각기 방면을 나누어 실지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19) 동북아역사재단, 2013, 위의 책, 99~100쪽, 「통감부파출소집무내칙」의 규정.

20) 당시 일본에서 '감찰(監察)'이라는 용어의 뉘앙스가 정확히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간도파출소의 설치 목적이 실제로는 조선인에 대한 감시와 관리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21)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잔무정리소에서 '기요'와 함께 1910년에 편찬·간행한 「間島産業調査書」는 간도의 농업, 지질·광업, 상업에 대한 조사 기록을 정리한 것인데, 행정조사라는 성격은 '기요'와 동일하다. 이 조사서는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선총독부자료로 소장되어 있으며 디지털파일로도 열람가능하다.

22)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선총독부자료로 소장되어 있으며 디지털파일로도 열람할 수 있다.

www.kci.go.kr

그런데 현장을 실지조사해 보니 "책상의 상상과는 전혀 상이한 실상을" 쓸 수 있게 되어 총독부의 간도 정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조사의 의의를 강조한다.[23] 즉 이 조사보고서는 "실지조사"를 통한 "실상" 파악, 즉 '필드워크'에 기초한 것이며, 또 특정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간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다른 간도 조사서와는 달리 지역조사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보고서의 전반부는 ①간도와 동변도 지역의 '지형적 조건'을 개괄한 후, ②'지방통치기구'를 소개하고 뒤이어 ③'인구의 구성과 변천'을 기술한 다음, ④종교・교육・위생 등 소위 '사회문화시설'을 소개・평가하고, ⑤토지・농업・임업・공업・상업 등의 '산업개황'을 제시하고 나서, ⑥금융・도량형・교통・통신 등의 '인프라' 등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구성은 지역조사의 공통적인 포맷으로, 지역조사서들은 이 포맷을 유지하면서 시기별로 조사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정치행정, 인구변천, 사회문화, 산업경제가 지역조사의 기본 범주인데, 이 조사는 지역조사가 갖춰야 할 조사 사항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1910년대 전반기 간도 지역 조선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24]

조사반은 조선총독부 촉탁 3인, 일본육군 장교 6인의 총 9명으로 구성되어, 1914년 8월 16일 경성(京城)을 출발하여 약 2개월 간 현지답사를 하고 10월 23일에 돌아왔다. 조사반의 구성에서 바로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조선군인(朝鮮軍人)'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25] 육군보병 정위(正尉) 김태원

23) 朝鮮總督府, 1915,「國境地方視察復命書」, 緒言, 1쪽.

24) 1914년 이전의 간도 조선인에 대한 또 다른 자료로는「間島居住鮮人状態調査書」(1911년 6월 조사),「図們江対岸(支那令)移住鮮人ノ状態 附支那革命乱ノ影響」(1912년 3월 조사)가 있다. 이 조사 자료를 토대로 1913년까지 간도 조선인 사회의 특질을 분석한 것으로는 申奎燮, 2002,「帝国日本の民族政策と在満朝鮮人」, 東京都立大学博士論文의 제1장을 참조할 수 있다.

25) '조선군인'은 한일합방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던 旧대한제국 군인들을 가리키는 법률용어로, 1911년「朝鮮軍人ニ関スル件」에 의해 규정되었다. 1920년의「朝鮮軍人ヲ陸軍将校同相当官ニ任用等ニ関スル件」(大正9年勅令第118号)에 의해 장교 이상의 '조선군인'은 일본군의 직제로 편제되었다. 그래서 하사관 이하만 '조선군인'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1946년 復員庁令第3号에 의해 위 1920년 칙령이 폐지면서 법적으로 소멸하였다.

www.kci.go.kr

(金泰元)과 김형섭(金亨燮), 그리고 同참령(參領)으로－나중에 민생단(民生團) 단장을 하는－ 박두영(朴斗榮)이 그들이다.[26] 조사답사의 목적이 국경지방 조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인 이상, 현지 조선농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생활관습 등을 잘 아는 이 '조선군인'들이 참여한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이 보고서만이 아니라 1940년대까지도 재만조선인에 대한 조사 보고에는 어떤 형태로든 민관의 조선인과 또 군경(軍警)이 참여하였다. 조선인은 조사 실무자이자 통역관으로 참여하였고, 군경은 접경지역 조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지주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유형 별로 재구성하면 <가. 인구변천과 이동, 나. 토지소유의 현황, 다. 경제활동 및 상황, 라. 조선과의 관계>의 4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가. 인구변천과 이동>의 현황은 지역조사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다. 무엇보다 간도는 조선인 집주지이자 잡거지로서 에스닉(ethnic) 문제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을 구성한다. 조선총독부도 간도가 군사요충지이면서 동시에 조선인 집주지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이 때 첫 번째 관심사항이 바로 간도의 민족 관계였다. 이 조사서에서도 당연히 민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27]

간도의 민족별 인구구성은 1913년 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조선인, 중국인[28]이 약 20만 명으로 두 민족집단이 간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조사와 중국정부의 조사를 서로 병치시켜 그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사반은

26) 朝鮮總督府, 1915,「國境地方視察復命書」, 3~4쪽.

27) <표1>「1913년말 간도의 민족별 인구구성」의 출처: 朝鮮總督府, 1915, 위의 글, 18쪽.

28) 조사자료에는 '支那人'으로 되어 있는데, 필자가 '중국인'으로 바꿔 표기하였다. 일본인은 '邦人'으로 되어 있다. 만주에서 '중국인(支那人-滿人)'의 범주는 인구조사의 시기와 주체에 따라 상이한 용어로 사용되었고 분류하는 인종·민족 집단의 기준도 미묘하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만주 인구의 민족 구성을 논의할 때에는 그 분류 기준의 변화와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표1〉 1913년말 간도의 민족별 인구구성

	일본정부의 조사	중국정부의 조사
일본인	425	-
조선인	160,499	141,025
중국인	41,340	52,750
러시아인	27	-
영국인	6	-
프랑스인	2	-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사반에 의하면 일본정부와 중국정부의 조사에서 인구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조선인의 중국 귀화를 인정하는가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조선인의 일본 국적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정부는 간도의 조선인 인구를 약 16만 명이라 파악했고, 조선인이 중국으로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버릴 것을 원하는 중국정부는 조선인의 인구를 약 2만 명 더 적은 약 14만 명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중국정부의 조사는 조선인 귀화자를 중국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중국인 인구는 일본 측 조사보다 약 1만 명 더 많다. 따라서 조선인, 중국인 수의 차이인 약 1만명 혹은 2만 명이 조선인 중국 귀화자인 셈이 된다.[29] 즉 일본정부는 조선인의 국적 이탈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중국정부는 조선인의 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선인-중국인의 수가 서로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조선인의 국적 이탈을 패전 때까지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이상, 이 조사서만이 아니라 일본이 주체로서 작성한 간도-만주에 대한 다른 인구 조사서에서도 '중국인'의 범주에 조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민족별 인구구성을 낳은 원인인 조선인들의 간도 이주의 양상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조사반이 정리한 조선인 이주의 동기는 ①조선에서의 생활난, ②연고이민과 월경경

29) 두 정부 인구조사에서 집계한 모집단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정부 조사의 중국인 수에서 일본정부 조사의 중국인 수를 뺀 것을 조선인 중국 귀화자로 보거나, 일본정부 조사의 조선인 수에서 중국정부 조사의 조선인 수를 뺀 것을 조선인 중국 귀화자로 보는 것은 둘 다 오류일 수밖에 없다. 즉 이 조사표만으로는 조선인 귀화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www.kci.go.kr

작, ③세금 및 부역 등의 경제적 문제, ④배일사상(排日思想) 등이다.[30]

잘 알려져 있듯 간도는 국경지대라는 특성과 조선농민 촌락의 분포라는 조건으로 인해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 역할을 하였다. 영토주권이 불분명하다는 간도의 특징은 일본이 대륙침략에 이용할 명분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항일독립운동 세력에게도 일본의 영향력이 억제되어 있으면서도 일본에 직접 맞설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이 조선인 집주지는 통감부 설치와 '한일합방'을 계기로 항일독립운동을 꿈꾸는 조선인들이 대거 이주해 들어왔다. 이런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던 조사반은 "간도 이주자 중에는 배일사상을 품은 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근래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자신들의 해석을 특별히 덧붙여 두기도 하였다.[31]

그러면 민족 관계와 연관되어 간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토지소유 관계를 살펴보자. 보고서에서는 1913년 간도총영사관의 추산을 인용한 것임을 밝히며, 당시 간도의 조선농민 총 호수는 약 2만8천 호에 소유지는 2만 정보, 중국인은 총 호수 약 6천 호에 총 소유지는 약 4만5천 정보였다고 정리하였다. 조선인 중 '지주'는 총 호수의 60% 정도인 1만7천 호 가량이며 중국인 지주는 총 중국인 호수의 80%로 추산된다고 한다(<아래 표2> 참조).[32]

조사반은 조선인 지주와 소작농의 형성에 대해 조선인들은 처음에는 간도에 들어와 중국인 지주 하에서 소작을 하였지만, 중국에 귀화를 하여 경작지의 소유권을 공인받아 여유 있는 지주가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근래의 이주자들은 자금도 없고 또 조선인들은 토지

30) 朝鮮總督府, 1915,「國境地方視察復命書」, 215~216쪽.
31) 朝鮮總督府, 1915, 위의 보고서, 216쪽.
32) <표2> 1913년 간도의 민족별 토지소유 (朝鮮總督府, 1915, 231쪽)

	地主 戶數	地主 1戶當 平均 所有地
조선인	약 17,000 호	약 2町步
중국인	약 2,600 호	약 10町步

www.kci.go.kr

소유권도 완전히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작인으로 지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33]

그런데 아래 표에서 '지주'라고 명기하였지만 조선인의 경우 평균 소유지는 약 2정보로 사실은 '지주'라기 보다는 '자영농'의 경작 규모이다. 당시 일본은 미작 자영농의 최소 경지 규모를 1.5정보(약4,500평) 정도로 산정하였는데, 간도의 조선인 지주의 경작 면적은 이 최소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 것이다.[34] 따라서 위 표에서 '지주'를 다수의 소작농을 거느린 대지주의 상(像)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적 최근 간도로 이주해 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소작인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조사반이 관찰한 조선인 신규 이민자들은 10정보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중국인 지주의 소작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인 '지주'는 소작농을 거느린 지주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농지를 스스로 자영하는 소농이었기 때문이다.

〈표 3〉 1913년 당시 간도의 민족별 영농 형태

	조선인	중국인
자작농	29%	56%
자소작농	35%	27%
소작농	36%	17%

<표3>[35]는 경작 형태를 민족별로 제시한 것인데 조선인은 자작농과 자소작농을 합쳐 64%로 위의 지주 60%에 근사한 수치를 보인다. 여기서도 조선인 '지주'가 대체로 자작농이며 그 절반 이상은 소작을 겸하여 생계를 꾸리는 영세 자작농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간도의 조선인 인구 중 순소작농은 100명 중 36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주로 1910년대에 들어와서 간도로 이주를 한 사람들로 보인다.

조사반은 이러한 토지소유 관계를 전제로 조선농민의 경제생활 실태를 밝혀 보고자 했는데, 자료의 미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대략 다음과

33) 朝鮮總督府, 1915, 앞의 보고서, 231쪽.
34) 조선인의 소유 경지를 미작(米作) 농지로 가정할 경우이다.
35) 출처: 朝鮮總督府, 1915, 「國境地方視察復命書」, 232쪽.

www.kci.go.kr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토지가격과 농업생산성의 경우, 간도의 경지가격은 조선의 1/2 내지 1/3에 지나지 않음에도 수확고는 2・30%, 많으면 50% 정도 높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았다. 게다가 아직 개간의 여유가 있어 더 많은 생산이 기대된다고 하였다.[36] 세금의 경우에는 조선과 일본 보다 간도가 더 농민들에게 제도적으로는 유리한데,[37]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당국의 가렴주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국가 근대화에 있어 일본의 우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38]

한편 조사반은 조선인의 취업 실태도 조사하였는데, 취업선이 조선 내로 향한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간도의 조선인들은 함경북도 출신이 다수인데, 이들은 고향을 등진 것이 아니라 고향과 간도를 언제든지 오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반의 보고서에서 조선인의 전체 취업선과 인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조선 내 취업 현황은 제시되어 있다. 조사반이 확인한 취업선은 바로 조선의 헌병보조원과 학교의 교사였다. 무산헌병분대에 11명이 회령헌병분대에 4명이, 종성헌병분견소에 1명, 경원헌병분대에 4명, 경흥헌병분대에 6명으로 총 26명의 간도 조선인이 일본 헌병보조원이 되었다고 한다. 교사는 2명에 그쳤다. 조사반은 본인들이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직장에 더 많은 조선인들이 취업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여 두었다.[39]

조선총독부의 1914년 간도 조사는 농업경영에 있어 간도가 갖는 호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조선인의 생활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이유를 중국 측의 간섭과 압박으로 돌리고 있다. 조선인 신규 이주자가 개간 가능지가 많이 남

36) 朝鮮總督府, 1915, 앞의 글, 233쪽. 한편 조사반은 간도의 경작 가능 농지를 총 30만 정보로 감정하였는데(8쪽), 조사 당시 6만5천 정보가 경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지는 여전히 충분하였다. 1930년대에 동척이 '간도 자작농 창정사업'을 계획하면서 간도의 최대 경지를 30만 정보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 조사반의 토지 감정은 매우 정확했던 것으로 보인다.

37) 소작료는 조선과 같은 방식으로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하고 타조식으로 나눈다고 보고한다. 朝鮮總督府, 1915, 앞의 보고서, 234쪽.

38) 朝鮮總督府, 1915, 위의 보고서, 232쪽.

39) 朝鮮總督府, 1915, 앞의 보고서, 241~242쪽.

www.kci.go.kr

아 있음에도 경작지를 매입하여 자영농이 되지 못하고 소작농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정부가 조선인의 귀화를 종용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간도에는 조선농민들이 개간하여 경작할 넓은 농지를 자연적인 조건으로 구비되어 있지만 중국정부의 토지정책, 조선인 정책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빈곤 소작농이 양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간도에서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한다면, 조선인들이 굳이 귀화를 하지 않고서도 간도의 토지를 구입하여 자영농으로 생활을 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만주의 토지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 방침—일본인의 만주 토지 소유권 요구—과 동일하다.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적자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간도 토지소유는 곧 일본인의 만주 토지소유권 보장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의 『간도국경지방시찰복명서』의 특징은 다음의 두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사방법의 특징으로 이 보고서는 1909년 '간도협약'으로 간도 영유권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40] 조선 국경 지역의 상황을 실지조사한 필드워크로 역사문헌 조사와 달리 지역의 현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조사목적의 특징으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만주지역 토지상조권을 획득한 1915년의 소위 '만몽조약' 체결 이전, 즉 조선인의 간도 토지 소유권이 중국 측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만몽조약'에서 일본이 중국에 요구한 핵심적 사항은 바로 일본인의 만주 지역 토지소유권 보장이었는데, 이 보고서는 마침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Ⅳ. 동척의 간도 지역조사, 1918년 『간도사정』

동척은 1918년 2월 『간도사정(間島事情)』이라는 간도 지역조사 보고서를

40) 간도 국경 문제는 만주국 성립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사이에 다시 재론되었다.

www.kci.go.kr

간행하였다. 이는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로 역사・지리・정치・경제・문화・산업・교육・위생 등 간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문을 총 망라하고 있다. 즉 조사 대상지로 설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가능한 한 모든 항목을 조사, 분류, 정리한 지역종합조사이다. 이 점에서 나이토 코난의 간도문제조사나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의 간도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앞 장에서 분석한 조선총독부의 『국경지방시찰복명서』의 틀은 수용하면서 내용을 더욱 확대・보강했다는 점에서 『간도사정』은 조선총독부 조사의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41]

동척은 간도 현지의 일본인들[42]과 조선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선인 조사협조자는 일진회 회원으로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에서부터 간도 경력을 시작하여 조사 당시에는 간도총영사관의 경부 이경재(李庚在)였다. 그는 나중에 '朝鮮人民會'와 '民生團'의 임원이 되는데, 『국경지방시찰복명서』의 간도 현지조사에 협력했던 박두병이 민생단 단장이 된 것과 같은 경로라 하겠다. 이들 현지 조사자들이 제공한 자료 이외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동척의 기사가 간도에 파견되어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한다.

동척은 간도의 역사・지리・정치・경제・사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도 그 중에서 특히 "경제산업 방면에 비중을 두고" 조사서를 편찬했다고 밝히고 있다.[43] 식민지 개발회사인만큼 현지 경제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자 했을 것이다. 실제로 동척의 조사서는 지역조사에 필요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조사 내용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간도의 토지소유권 문제와 동척의 만주 진출

41) 「국경지방시찰복명서」나 『간도사정』 모두 간도총영사관과 봉천총영사관의 조사협조를 받아 현지조사원, 조사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총영사관의 조사와 같은 외무성 조사들이 조선총독부 계통의 조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볼 것이다.

42) 末松吉次, 川口卯橘, 靑江房太로 기재되어 있다.

43)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 『間島事情』, 例言, 1쪽.

www.kci.go.kr

토지와 농업은 농업식민회사 동척의 본래 영역인 만큼 그 조사 내용이 대단히 상세하다. 1917년 당시 간도의 토지소유 및 경작 현황을 '社'[44]라는 것을 단위로 하여 하나하나 기록해 두고 있다. 여기에는 토지소유 현황에서부터, 지주 일람, 농가호수, 경작면적, 경작형태, 농업노동자의 임금, 토지가격, 농가대출금리 등이 총 망라되어 제시되어 있어, 1910년대 중엽 간도 농촌과 농업의 현황과 실태를 세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토지제도의 경우, 무엇보다 토지소유권 문제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정부가 외국인의 간도 토지 소유권을, 특히 일본인을 겨냥하여 제한하면서 가장 큰 곤경에 처한 것은 간도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던 조선인 농민들이었다. 동척의 조사는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설명한다. 원래 간도 지역의 공유지(公有地)는 5년을 기한으로 개간을 완료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여 지권(地券)을 교부받을 수 있었지만, 조선인은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귀화 조선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이 소유권은 꽤 불확실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45] 이런 탓에 토지를 매매하려 할 경우 수속과정이 대단히 복잡하였다.

동척은 이 과정을 도표로까지 그려가며 상세히 설명한다. 간도에서 非귀화 조선인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5단계의 수속을 거쳐야만 했다고 한다. 수속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계마다 많은 사람이 개입하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동척이 설명한 토지매입 수속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46]

---

44) 이 보고서는 간도를 '社'를 간도 내 지역 명칭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이는 행정구역인 洞과 村과 겹치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사라도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서로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 '사'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도 그 의미와 연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사'는 그 한자의 의미로 볼 때, 본래 지역 명칭이 아니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의 집단, 즉 (개척단과 같은) '사회조직'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애초 사회조직을 가리키던 말이 생활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특정 지역명처럼 쓰이다가, 결국 근대적 행정구역이 공간 구획을 원리로 편성되면서 소멸한 게 아닌가 한다.

45)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 앞의 책, 255쪽.

www.kci.go.kr

토지의 소개 → 매수인은 토지매입 명의인[47]을 선정 → 소유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명의인·중개인과 함께 반드시 토지에 직접 가서 소유·임대 관계를 실지조사 → 매수인은 중개인, 명의인과 토지매입 대금을 교섭 → 매매계약 → 매수인이나 명의인이 토지 대금 지급 → 매도서 교부(代書人이 매도증을 대서하고, 명의인·중개인·증인·인접토지소유자가 연서하고, 매수인이 지장을 찍음) → 명의인은 토지 소재지 社長에게 매매사실 증명을 수령 → 명의인은 토지 소재지 보위단에서 매매사실 증명을 수령 → 명의인은 거래세를 납부하고 지권을 수령 → 명의인은 매매부가세를 납부 → 명의인은 관공서에 가서 토지등기 수속을 함 → 매수인-실소유주는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 → 실소유주는 명의인에게 토지관리비를 지급 → 실소유주는 명의인을 통해 토지세를 납부.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토지 매입 수속을 밟아도 토지 등기가 실소유주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간도의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명의인이 다수의 실소유주를 한데 묶어 하나의 지권으로 등기를 한 경우, 각 실소유자들은 자기 뜻대로 토지를 팔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했던 것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일본은 1915년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48] 일명 '만몽조약'에 의해 만주에서의 토지상조권(土地商租權)을 행사할 권리를 중국으로부터 획득하였다.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 와중 동맹국 영국의 적국이었던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칭따오를 중심으로 한 산동의 독일 조차지 일대를 점령하였다. 일본은 산동 주둔 일본군의 무력을 이용해 중국정부에 대해 21개의 권리와 이권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對중국 21개조요구'이다. 일본은 이 요구 사항에 대해 중국정부와 협상한 끝에 몇가지 권리를 획득하였는데, 그 권리의 핵심은 바로 만주에서의 토지소유권과

46)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 앞의 책, 257~259쪽.
47) 명의인은 주로 귀화조선인들이 맡았는데, 당시 이들을 '地方主人'이라 불렀다 한다.
48) 공식명칭은 「南滿洲及東部內蒙古二關スル條約」으로 1915년 5월 조인되어 8월 시행되었다. 이 '만몽조약'에 대해서는 淺田喬二, 1989, 『(增補)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龍溪書舍를 참조할 것.

www.kci.go.kr

영사재판권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요구한 토지소유권은 만몽조약에서 '일본은 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서 토지를 상조할 권리를 갖는다'는 식으로, '소유'가 아니라 '商租'라는 용어로 조인되었다. 이 '상조'라는 생소한 한자에 대해 일본은 소유권으로 해석했고, 중국은 단지 사용권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실 일본도 이것이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협상 시에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더 밀어 붙이지는 않았다.[49] 『간도사정』에서도 토지상조권의 획득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의 간도 토지소유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일본인에 대해서는 거의 승인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50]

동척이 이렇게 간도 토지소유 문제를 세밀하게 조사한 것은 동척 그 자신의 변화 때문이다. 동척은 조선으로의 식민지 농업이민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1910년대 후반이 되면 그 성격을 일변한다.

테라우치 마사다케 초대 조선총독은 1916년 일본 총리대신으로 취임하고 곧 만주에 대한 적극적 침략 정책을 입안・시행하였다. 테라우치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만주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이권 확대로, 그 초점은 만주의 통화와 토지를 장악하여 만주 경제 전체를 일본 경제권의 일부로 만드는 데 있었다. 그는 통화전쟁와 토지매수를 담당할 두 개의 국책회사를 지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의 식민지 중앙은행인 조선은행과 조선의 이민・토지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있던 동척이었다.

동척은 통감부 기인 1908년 '조선에서의 척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민지 개발회사이다. 이 국책특수회사는 일본농민의 조선 이주를 사업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의 농업 개발을 위해서는 우수한 농법을 익힌 일본농민들이 조선 농촌으로 이주해 와서 그 우수성을 조선 농민에게 확산시킨다는 것

49) 이에 대해 일본이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압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해석도 있고, 반대로 만주에 개입할 빌미를 위해 의식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50) 중국 측은 간도 조선인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토지 소유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고 편법으로라도 땅을 매입하여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민법 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www.kci.go.kr

이 설립 당시 동척의 사업 내용이었다. 일본농민의 경작 이주를 위해서는 농지가 필요했는데, 동척은 이 이주 농지 확보를 위해 조선의 농지를 매수하고, 이 회사 농지를 다시 일본농민들에게 장기저리로 불하하는 방식이었다. 동척은 토지수탈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 출발은 식민지 농업이민에 있었으며, 주요 사업은 토지 매수업과 토지 담보대출업이었던 것이다.[51]

테라우치는 동척의 이러한 자금력과 기능을 만주에서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917년 6월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을 개정하여 동척의 영업 범위를 기존의 조선에서 만주로까지 확대하였다.[52] 국책회사인 동척은 이에 맞춰 곧바로 만주의 중심지인 봉천과 대련에 지점을 설치하여 만주 지역 토지 매수에 돌입하였다. 동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對중국 21개조 요구'와 '만몽조약'을 통해 일본이 만주 지역에 대한 토지상조권을 중국정부로부터 획득한 덕택이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토지상조권이란 말은 국제정치상의 협상을 위해 중국·일본 양자가 타협한 조어(造語)로 일본인의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그간 금지되었던 만주 지역의 외국인 토지 매수를 법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동척을 내세워 만주 토지 매수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53]

동척이 1918년 2월 이 『간도사정』이라는 방대한 간도 지역 종합조사 보고서를 편찬·간행한 것은 바로 동척 자신의 만주 진출을 위한 사전조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척은 1918년부터 토지 및 농업을 중심으로 한 만주 개발을 사업의 주력으로 하게 되어, 이를 위해 만주 지역의 토지 관계 사항을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토지 매수는 동척 사업의 핵심으로 그 거래 관습 및 소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만 했었다. 동척에게 있어 토지

51) 동척의 설립 과정 및 초기 성격에 관해서는 君島和彦, 1973·1974, 「東洋拓殖株式會社の設立過程(上,下)」, 『歷史評論』 第282·285號을 참조한 것이다.

52) 엄밀히 말하면 '일본 본토 이외의 지역'으로 여기에는 조선과 만주는 물론이고, 일본의 경제력이 닿은 중국, 동남아시아, 남양군도를 포괄하였다.

53) 동척의 만주진출과 동척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들을 참조할 것. 波形昭一, 1985, 『日本植民地金融政策史の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黑瀨郁二, 2003, 『東洋拓殖會社—日本帝國主義とアジア太平洋』, 日本經濟評論社.

www.kci.go.kr

상조권이라는 모호한 권리 속에서 어떻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 간도라는 만주의 문제지역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은 회사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였던 것이다.

2. 간도 상업의 호황과 일본 경제권의 확장

동척이 『간도사정』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에 조사・보고한 것은 간도 상업의 역동성이었다. 한국에서 알려진 간도 조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간도 조선인의 상당수, 특히 용정 지역 조선인들 중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재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동척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간도 상업에 대한 상세한 조사 덕택에 우리는 1917년 당시 간도 조선상인들의 성명과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 업종, 거래액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54]

동척의 조사에 의하면 용정 세관[55]이 개설된 이래 간도의 대외 무역은 부침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한다. 1914년과 15년은 제1차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교역량이 다소 줄긴 했지만 16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동척은 조사 당시인 17년에는 교역이 더욱 활발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간도 상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56]

간도의 무역은 몇 개의 루트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주요한 것으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용정촌 무역'이다. 이 루트는 조선의 청진항을 출입항으로 했기 때문에 '淸津系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용정-청진 루트를 통해 주로 일본과 조선의 상품이 들어왔는데, 청진항에 하역된 후 조선 국경도시 회령을 거쳐 용정으로 들어왔고, 용정에서 일본상인이나 조선상인에 의해 간도 및 길림 지역으로 유통되는 방식이었다. 반대로 콩과 같은 간도

54)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 앞의 책, 563~568쪽.
55) 중국에서는 세관을 '海關'이라 하는데, 간도의 용정 해관에는 한 영국인이 해관장으로 있었는데 그는 『상상의 공동체』로 유명한 동남아시아 전문가 베네딕트 앤더슨,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고대에서 봉건제로의 이행』을 쓴 영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페리 앤더슨 형제의 父였다.
56)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 앞의 책, 455~456쪽, 특히 「龍井村輸出入額累年比較表」(1911~16年).

www.kci.go.kr

의 농산물은 반대 순서로 청진항에 도착한 후 일본, 조선, 그리고 영국으로까지 수출되었다. 이 용정-청진 루트는 일본상품과 일본상인이 주도하는 일본무역망의 일부였던 것이다.

또 다른 루트로는 '국자가 무역'으로 중국계의 중심도시인 국자가(현 延吉)을 중심으로 한 교역망이다. 국가자 무역은 다시 북쪽의 훈춘계통(琿春系統)과 서쪽의 길림계통(吉林系統)으로 나눠졌다. 훈춘계통은 용정 북방의 국경 도시 훈춘을 중개지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과 조선북부의 웅기를 출입항으로 했다고 한다. 對러시아 교역은 블라디보스톡-훈춘-국자자로, 對일본・조선 교역은 웅기-훈춘-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훈춘계통은 제1차세계대전으로 러시아가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수송수단이 단절되고 물자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여 위기에 봉착했다고 한다. 길림계통은 주로 중국산 농산물의 교역루트인데 꾸준하기는 하지만 교통의 불비 등으로 인해 큰 몫은 차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척은 국자가 무역은 점차 회복세에 있으며, 특히 조선상인들이 가세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중국상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국자가의 상권을 조선상인들이 거의 30% 이상 점유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조선상인들은 더 큰 상권인 청진계통에 대해서도 50%를 점유하면서 간도 무역의 중심 주체로 부상했다고 동척은 보고하고 있다.[57]

간도 무역은 청진계통과 훈춘계통을 두 축으로 하는 것 이외, 土里. 古邑, 慶興, 新阿山, 龍洞, 鍾城, 會寧, 下社地 등을 중개지로 한 對조선 국경무역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58] 이처럼 간도는 동과 북으로는 對일본, 對조선, 對러시아 교역의, 서와 남으로는 對중국 교역의 국제적 중개무역지대로서 크게 번성하였다.[59] 그래서 제1차세계대전, 러시아혁

57)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 앞의 책, 476~479쪽.
58)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 앞의 책, 495~519쪽.
59) 동척은 간도 무역의 국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수천 킬로 떨어진 '러시아에서의 소비에트혁명과 윈난(雲南)에서의 제3혁명에 의한 동요에도 불구하고' 용정은 최고수준의 무역

www.kci.go.kr

명 등 세계사적 정세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았다. 간도의 이러한 국제적 성격은 지금 연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간도 무역에 대한 보고에서 동척이 강조하는 것은 간도의 국제성보다는 간도가 일본 경제권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간도의 상업이 용정을 중심으로 활황을 보이게 된 것은 바로 일본과의 교역 증대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간도가 일본 경제권의 일부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 경제권이 간도를 중심으로 만주 일대로 뻗어나가게 된 것에는 간도 재주 일본상인과 조선상인의 활동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 동척이 분석한 결론이다.[60]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간도 일본상인과 조선상인의 거점이었던 용정은 조선의 청진항과 '淸會線'으로 연결된 북만주-일본 교역의 결절점으로, 일본 경제의 활황과 일본의 경제력 팽창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지역이다. 일본이 청진-회령-용정으로 이어지는 北鮮-間島 일대를 러일전쟁 기부터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은 이 교통·교역 루트가 일본제국주의의 궁극적 목표였던 북만주를 향한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동척이 『간도사정』에서 교통과 운송에 대해 각별히 지면을 할애한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동척은 간도를 관통하게 될 길회철도(吉會鐵道)[61]의 부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들어가며 부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한다. 동척은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던 길회선 철도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62]

①조선 동해의 항구인 淸津과 두만강 국경의 會寧을 잇는 淸會線
②會寧을 거쳐 龍井을 지나 吉林으로 가는 吉會線
③吉林에서 長春으로 연결되는 吉長線

량을 보였다고 한다.

60)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 앞의 책, 456쪽 등.

61) 조선의 會寧과 만주의 전통적인 중심도시 吉林을 잇는 노선으로 만주를 동서로 가로지라는 횡단철도였다. 회령-용정-국자가(현 현길)-길림으로 연결되고 나중에 길림-장춘-치치하얼-하이라얼로 하여 내몽고까지 이어졌다.

62)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 앞의 책, 220~222쪽.

www.kci.go.kr

이 ①+②+③ 노선을 이으면 조선의 청진에서 만주의 맨 한가운데 있는 장춘으로 연결되는 만주 횡단노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 방면으로는 청진에서 일본의 쓰루가(敦賀) 간의 항로와, 쓰루가-오사카(大阪) 간 철도를 이용하면, 일본 본토의 상업 중심도시인 오사카에서부터 만주의 중심부 장춘까지 이어지는 교통수송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조선의 청진과 만주의 간도는 주요 경유지로서 무역의 중개지로서만이 아니라 산업도시로서도 발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63]

동척의 이러한 일본-조선-만주 교통망 구축 구상은 동척의 독자적인 제안인 것은 아니다. 조선의 청진을 중개항으로 하여 일본 본토와 간도, 길림을 잇는 교통망의 중요성은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의 「간도산업조사서」(1910)에서도 이미 언급되고 있는 등,[64] 조선과 만주를 일본 경제권으로 편입시키고자 할 때 항상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구상은 러일전쟁 기에 일본군이 청진에 주둔하면서 청진-회령-간도의 육로 교통망 구축을 군의 실지 답사를 통해 검토한 후, 전쟁 직후 일본 육군성이 공식화한 대륙전략 루트였다.[65][66]

물론 이 만주 횡단 철도는 경제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사실은 군사철도로서의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망의 완성은 곧 만주에 대한 일본의 군사 지배력 강화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대련에서부터 하얼빈을 거쳐 북만주-소련 국경도시인 흑하(黑河, '아이훈')에 이르는 만주 종단철도와 회령에서부터 하얼빈을 거쳐 몽고-소련-만주의 삼각국경도시인 만주리(滿洲里)에 이르는 만주 횡단철도를 완성하여 대규모 군

63)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 앞의 책, 214~231쪽.
64)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殘務整理所, 1910, 「間島產業調查書」
65) 金靜美, 1998, 『中国東北部における抗日朝鮮・中国民衆史序説』, 現代企画室, 78쪽.
66) 이는 1930년대 말에 이른바 '環日本海루트'라는 이름으로 기본 골격에서 거의 그대로 실현되었다. 1931년 조선총독에 취임하는 우가키 가즈시게는 이 제국 교통망을 총독부의 '북선루트' 정책으로 구체화하였는데, 그는 러일전쟁 기에 육군 소장 장교로서 청진 부근에 주둔하며 청진-회령-간도를 잇는 루트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알려져 있다(金靜美, 1998, 위의 책). 일본본토의 환일본해루트와 조선총독부의 북선루트는 다소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정재정, 2015, 「일제하 '北鮮鐵道'의 경영과 日朝滿 新幹線의 형성」, 『역사교육논집』 54를 참조할 것.

www.kci.go.kr

사력을 일거에 투입할 수 있게 된 1936년 이후 북만주의 항일게릴라 활동이 급속히 소멸해 갔다는 사실은 철도망이 갖는 군사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Ⅴ. 조선은행이 조사한 간도 경제와 상업 중심지 용정

3.1운동 직전인 1918년 조선 식민개발회사였던 동척은 마침내 對만주 사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동척이 간행한『간도사정』은 이를 위한 자료조사의 결과물이었다고 하겠다. 동척과 함께 만주 사업에 참여한 조선계 국책회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은행'이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테라우치 당시 일본총리는 제국일본의 만주 경제침략을 위해 조선은행과 동척으로 하여금 만주에서 통화전쟁과 토지매수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이제 조선은행의 간도 조사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대한제국의 舊한국은행을 계승하여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 출범한 조선은행은 국정통화발권과 통화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국립중앙은행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조선은행은 식민지의 국고출납과 화폐발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중앙은행(central bank)이지만, 외환거래와 해외금융을 또 하나의 주력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는 해외은행(overseas bank)이었다. 또 일반예금과 대출까지도 취급했다는 점에서 겸업은행(universal bank)이기까지도 하였다. 조선은행의 이러한 복합적・종합적 기능은 조선은행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은행이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여 대출 및 예금 업무를 하며 해외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적으로 조선은행이 해외은행이면서 겸업은행인 덕택이었다. 조선은행 해외지점・출장소에서는 무역상을 위한 외환결제와 상공인들을 위한 예금대출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조선은행 조사부가 조선 내 경제금융 현황만이 아니라 간도-만주를 비롯

www.kci.go.kr

한 해외의 경제상황 및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를 시행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경제조사는 국책은행의 통상 업무로, 조선은행도 조사부를 두어 조선의 경제는 물론이고 조선은행의 영업구역과 관련된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래서 조선은행의 경제조사보고서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 및 일본경제권, 특히 엔 통화권의 상황[67]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17년 조선은행은 간도 용정에 출장소를 개설하여 간도에서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는 북선(北鮮) 일대와 간도,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등 한중러 접경 지역에서의 무역량이 크게 증대하고 외환 거래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한 대응이면서, 동시에 테라우치 총리가 주도한 일본 엔 통화권 확대 기획이기도 하였다.

동척의 『간도사정』이 간행된 1918년 조선은행도 간도 지역에 대한 경제조사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조선은행 조사부가 간행한 「국자가 방면의 경제상황(局子街方面二於ケル經濟狀況)」(1918.4)이 그것이다.[68] 이 보고서는 1917년 말을 시점으로 간도 경제의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간도의 무역, 금융기관, 경제계의 근황, 유통통화의 4개 부문으로 정리되어 있다. 작성자는 조선은행 용정출장소 소장 池田五郎으로, 보고서는 조선은행 조사부의 명의로 간행되었지만 실제 작성한 것은 조선은행 용정출장소였다.

조사의 주된 주제는 간도 금융기관의 현황과 물자의 유통 루트, 두 가지에 맞춰져 있다. 조사 보고서는 조선은행 용정출장소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한다. 간도의 중심이 중국인의 중심지로서 정치 중심이기도 한 국자가에서

67) 발권은행인 조선은행은 조선은행권으로서의 円을 발행하였고 이 조선은행권 엔과 일본은행권 엔은 1:1 태환으로 설정되어 엔 통화권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태환의 절차에 교묘한 제한을 두어 일본은행권이 조선은행권과 자동적으로 연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일본은행권은 조선은행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조선은행권은 일본은행권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설계하여, 조선은행권의 가치 하락이 일본은행권과 일본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68) 조선은행의 이 간도 경제조사 보고서가 갖는 중요성은 원광대학교 김주용 교수가 필자에게 환기시켜 준 것이다. 보고서의 원문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조선총독부자료로 소장되어 있으며 디지털파일로도 열람할 수 있다.

www.kci.go.kr

조선인 집주지이자 상업 도시인 용정으로 옮겨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조선은행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상업과 산업의 발달에 있어서 원활한 금융 공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실한 상황에 있던 다른 중국계 은행과 달리 강력한 엔을 기반으로 한 조선은행의 존재 덕택에 간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물자 유통 루트에 있어서도, 조선은행 출장소가 위치한 용정은 조선의 청진항-국경도시 회령으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청진항을 통한 만주 물류 유통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지리적 거점인데, 마침 이 곳에 조선은행 출장소가 설치되면서 그 지리적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도 말한다.[69]

간도는 조선인들이 이주를 해오면서 용정이 먼저 발달하였지만, 중국은 국자가에 행정조직을 설치하여 중국인이 주도하는 도시이자 간도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려 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조선인 '보호'를 빌미로 간도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간도총영사관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용정에 두고, 용정을 간도의 중심 도시로 하려 하였다.[70] 즉 중국의 국자가와 조선-일본의 용정이 대립・경쟁 구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은행 용정출장소는 이 도시 간 경쟁에서 용정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엔을 기반으로 한 조선은행의 금융능력과 청진-회령-용정으로 연결되는 일본과의 교역 루트가 갖는 경제력덕택이라고 분석한다. 일본은 조선은행권 円과 조선은행 용정출장소를 통해 간도를 일본 금융망의 일부로 포섭하려 하였던 것이다. 용정은 엔 통화권 금융도시이자 對일본 교역도시라는 점에서 일본본토-식민지 조선-간도로 연결되는 일본 경제권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조선은행 용정출장소의 설치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논지이다. 즉 조선은행은 1910년대 후반

69) 朝鮮銀行調査部, 1918,「局子街方面二於ケル経済状況」, 19~20쪽.

70) 현재에도 간도의 중심 도시인 연길이 아니라 용정에 일본의 주요 식민통치기구의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www.kci.go.kr

간도 경제의 호황에는 용정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또 용정이 간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921년 조선은행 조사부가 간행한 「만주지방 조선인의 경제 및 금융 상황(滿洲地方に於ける朝鮮人の經濟及金融狀況)」(1921년 11월 조사)[71]은 간도의 조선인 상업계의 흥망을 보다 상세하게 조사한 보고서이다.[72] 이 보고서는 조선인들은 간도 이주 후에 상업으로 전환하여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수단은 회령과 청진의 조선상인과의 교역 네트워크에 있었다고 파악한다. '청진항-국경도시 회령-용정'으로 연결되는 對일본 교역망의 핵심 고리를 조선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때로는 이 조선상인('鮮商')들은 일본상인들을 누를 정도였다고 한다.[73]

그런데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앞서 동척의 『간도사정』과 위의 「국자가 방면의 경제상황」이 기록한 간도 상업의 활황이 1920년에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920년 봄 일본 본국이 전후반동공황(戰後反動恐慌)으로 경제가 위축되자 간도의 조선상인들은 일거에 대타격을 입었다. 파산자가 속출하고 점포를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상인들이 다수였을 정도였다고 한다.[74]

사실 조선상인들은 그 기반을 대(對)일본 교역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몰락의 원인 그 자체였을 것이다. 조선은행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도 조선인의 민족성과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굳이 요인으로 끼워 넣어 두었다. 조선은행은 조선상인의 몰락은 조선상인들의 한탕주의와 무책임성, 무계획성에 그

71) 朝鮮銀行調査部, 1921, 「滿洲地方に於ける朝鮮人の經濟及金融狀況」. 이 조사보고서는 日本國立國會圖書館 소장본이며, 디지털컬렉션으로도 공개되어 있다.

72) 흔히 간도의 조선인 사회는 농업 중심, 그것도 미작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조선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척과 조선은행의 보고서들은 간도의 상업 발달과 조선 상인들의 자본 축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간도가 국경 교역지대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간도에서의 상업 발달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김주용(2008, 『일제의 간도 경제침략과 한인사회』, 도서출판선인)이 그 전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두었다.

73) 朝鮮銀行調査部, 1921, 위의 보고서, 1쪽.

74) 朝鮮銀行調査部, 1921, 앞의 보고서, 1쪽.

www.kci.go.kr

원인이 있어 일본 경제의 위축에 전혀 버티지 못하고 일시에 몰락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별다른 설명 없이 조선상인들의 경제력 붕괴에는 '不逞團의 위협'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여 두기도 하였다. 조선은행은 향후 대책으로 조선인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근면해져야 하며, 또 생명재산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불령선인이 준동(蠢動)할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75] 1920년 간도 상업 붕괴의 원인이 실제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조선은행의 기록은 조선상인의 재력 축적과 항일운동 간의 모종의 관련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조선은행 용정출장소는 식민지인 조선과 중국의 영토 만주를 잇는 간도라는 경계지대에서 제국의 경제권을 연결하고 확장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조선은행과 동척의 간도 경제조사에서 강조되는 것은 일본 경제의 확대로 인한 간도 상업의 활황이다. 간도의 경제는 일본과의 활발한 교역 속에서 성장・발달하였기 때문에 두 지역의 경제적 연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연계의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집단은 일본상인과 조선상인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조선은행은 조선상인이 연계망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일본상인을 능가할 정도로 수완을 발휘했다고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김주용이 지적하듯 북선-간도 교역 루트는 일본이 창출하여 장악한 교역망으로 그 주도권은 일본상인들에 있었다[76]는 점을 생각할 때 조선상인에 대한 조선은행의 기록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상인들은 일본상인들의 현지 파트너로서 교역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은행이 '鮮商'이라는 칭호까지 내려가며 조선상인을 부각시킨 것은 일본 경제의 만주 침투, 즉 일본 경제권의 확대에 있어 두 민족집단 간 협력의 필요성과 제국신민으로서 조선인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75) 朝鮮銀行調査部, 1921, 위의 보고서, 2쪽.
76) 김주용, 2008, 앞의 책, 173쪽.

www.kci.go.kr

Ⅵ. 나가며: 조사체제의 전환, 영토주의에서 경제주의로

이 글이 '1919년 전후'를 분석의 시점으로 삼은 것은 한국사와 동북아시아사에서 1918~20년의 시기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1918년은 조선의 식민개발회사이자 경제지배기구였던 동척과 조선은행이 만주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한 시기였다. 또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만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이 단행된 해이기도 하다. 시베리아 출병이라는 대규모 병력 동원이 간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별로 관계가 없었는지 아직 판별할 수 없지만, 연해주 러시아의 격동은 간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간도 상업의 호황이 끝난 1920년은 조선에서는 소위 '문화통치'와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된 해이다. 간도에서 1920년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이라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과가 있었던 해이면서, 또 그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소위 '간도대토벌'이라는 일본군의 잔혹한 군사작전이 펼쳐진 해였다. 1920년 경신년은 간도 조선인들에게 경제파탄, 승전, '참변'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검토한 것은 한국사 연구의 맥락에 비추어 간도 조사의 계통을 재구성해 보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맨 먼저 통감부 기의 간도 국경문제에 대한 조사를 간략히 살펴보았던 것이다. 한국사에 있어 간도는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그 무엇보다 영유권 문제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국경 획정에 대해서 막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 또 하나의 맥락은 항일독립운동사의 일환으로서의 간도 연구이다. 간도 그리고 그 조선인 중심인 용정은 항일운동의 거점이면서 동시에 일본 만주 침략의 교두보이기도 하였다. 간도총영사관을 비롯하여, 동척・조선은행 등 일본의 주요 지배기구가 용정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간도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간도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은 이 기구들이 조사・작성

www.kci.go.kr

한 문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항일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 이 간도 생산 문헌들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로서 분석되고 있다.

이 글이 밝히고자 한 것은 이 조사자료들이 갖는 정치적 성격이었다. 이 자료들은 수치화되고 객관화된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어 제국주의의 간도 침략과 조선인 지배를 비판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조사가 기획되고 조사의 목적이 선정되고, 또 조사자가 구성되는 과정은 제국 지배의 확장이라는 목표에 맞춰져 있었다. 조사의 목표를 기준으로 할 때 1906년부터 1920년까지 진행된 일본의 간도 조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나이코 코난과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의 간도 조사는 국경 문제를 중심 과제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제국일본의 영토권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 조사라 하겠다. 이에 비해 조선총독부의 「국경지방시찰복명서」는 간도에서의 민족관계를 중심 과제로 하여 차별받는 조선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척의 『간도사정』과 조선은행의 경제조사는 용정을 거점으로 한 제국일본 경제권의 확장을 중심 과제로 하였다. 즉, 이 세 시기 조사들은 그 목적으로 말하면 제국일본의 영토 지배, 인민 지배, 경제 지배라는 3개의 유형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간도 지역조사의 각 체제는 제국 영토의 확장, 제국 신민의 확장, 제국 경제의 확장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면 변화에 상응했던 것이다. 특히 동척과 조선은행의 보고서들은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간도 조사의 목적과 초점이 영토주의에서 경제주의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경 영토문제는 단지 연혁적인 것으로만 설정되어 당대 간도의 현실을 구성하는 역사적 배경으로 축소되어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조사자료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殘務整理所, 1910,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동북아역사재단 역주판, 2013)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殘務整理所, 1910.「間島產業調查書」

朝鮮總督府, 1915,「國境地方視察復命書」

東洋拓殖株式會社, 1918,『間島事情』

朝鮮銀行調查部, 1918,「局子街方面二於ケル經濟狀況」

朝鮮銀行調查部, 1921,「滿洲地方に於ける朝鮮人の經濟及金融狀況」

2. 연구문헌

김주용, 2008,『일제의 간도 경제침략과 한인사회』, 도서출판선인

박찬흥, 2015,「滿鮮歷史地理調查部와 고대 '滿鮮歷史地理' 연구」,『역사와 담론』75

윤해동, 2018,「나이토 코난의 '동양문화' 연구와 '근세론'의 명암」,『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 소명출판

이왕무, 2013,「해제: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의 설립과 간도 경계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편,『訳註『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임동근, 2017,「프랑스 지리학의 만주인식의 변화 : "아날드제오그라피" 논문에 등장한 '만주'」,『만주연구』24

정상우, 2008,「1910~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囑託)의 학술조사사업」,『역사와 현실』68

정재정, 2015,「일제하 '北鮮鉄道'의 경영과 日朝滿 新幹線의 형성」.『역사교육논집』54

제임스 C. 스캇, 이상국 역, 2015,『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 아나키즘의 역사』, 삼천리

君島和彦, 1973・1974,「東洋拓殖株式会社の設立過程(上,下)」,『歷史評論』第282・285号

金静美, 1998,『中国東北部における抗日朝鮮・中国民衆史序説』, 現代企画室.

申奎燮, 2002,「帝国日本の民族政策と在満朝鮮人」, 東京都立大学博士論文

浅田喬二, 1989,『(増補)日本帝国主義と旧植民地地主制: 台湾・朝鮮・満州における日本人大土地所有の史的分析』, 竜渓書舎

波形昭一, 1985,『日本植民地金融政策史の研究』, 早稲田大学出版部

黒瀬郁二, 2003,『東洋拓殖会社－日本帝国主義とアジア太平洋』, 日本経済評論社

투고일 : 2018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0월 29일

www.kci.go.kr

■ Abstract ■

Area Research of Colonial Borderland: *Kando*(間島) Reports by the Imperial Japan circa 1919

Cho, Jung woo (Kyungnam University)

The Imperial Japan has left many field-notes of the colonial borderland *Kando* (間島) and its Koreans. However, research data have often been used selectively and arbitrarily without the accurate review of the purpose and features of the research. Thus, in this article, I tried to trace the characteristic change of the area researches by reconstructing the genealogy of that reports in the context of the modern Korean history. Japan's *Kando* researches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 by each types: 1. the border investigations aimed at expanding the imperial territory, 2. the investigations of ethnic relations aimed at the protection of the empire's subjects, 3. the economic investigations aimed at expanding the economic sphere of the empire. In particular, the field reports of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and the Bank of Joseon, published around 1919, clearly showed that Japan's interest in *Kando* has shifted from territorialism to economism.

Key words : *Kando*(間島), area research, economic investigation, fieldwork, Oriental Development Company(東拓), border trade, transit trade

www.kci.go.kr